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 제 발 표】

김 원 식 교 수 5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문】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3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영 용 회 장..... 43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 광 병 교 수..... 51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 은 하 센터장 5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이 상 철 실 장 63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73

프로그램

1 부

사회 :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차기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토 론

.....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김 원 식 교수

[주 제 발 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김 원 식 교 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차기정부의 복지: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김 원식 (건국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1. 9. 15

목차

- I. 서론
- II. 복지 New Normal
- III. 문재인정부의 복지 현실
- IV. 복지 Stress Test
- V. 정책방향: 복지 네트워크 혁신
- VI. 결론: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I. 서론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위기

-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실업으로 양극화 심화
 -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입법 및 실행
- 복지 불만족 심화
 -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부실화
 - 주관적 복지 불만족인구 비율 19.2%: OECD 주요선진국의 2배 수준
- 복지비 부담이 재정불안정(국가부채 증가)으로 전이
 - 국민들의 복지비 부담 한계
 - 문재인정부(2017~2020) 국가채무 186.7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42.2조원), GDP대비 48.4%(2020)
 - 박근혜정부(2013~16) 국가채무 136.9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06.8조원), GDP대비 38.3%(2016)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위기

- 복지시스템의 부실관리
 - 사각지대: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이탈로 소득파악 곤란/ 긴급대응 미흡
 - 중복급여: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포폴리즘 복지 경쟁
 - 구조적 도덕적 해이: 경제적 비유인 구조로 취업대기자 양산
 - 자부담 서비스를 국가서비스화: 고교 의무교육, 자율고 폐지 등
-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 인건비(복지관리비) 상승: 복지비 누수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공무원 증원
 - 문정부 출범 후 공무원 9만2천명 IMF~2017년 8만7천명 증가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등 신제도 요구 및 양산 중

탈코로나(Exit Corona)를 위한 복지정책

- Innovative open Economy 환경 조성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 4차산업 혁명
- **복지정책의 목표: 빈곤박멸(Poverty Eradication)**
 - 복지정책 vs 사회(발전)정책
 - 복지정책: 빈곤층 대상
 - 사회정책: 전국민 대상
 - 전국민 사회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세금낭비
- 국가경제 운영 체계의 정상화
 - **전국민 경제 재교육**
 - 반자본주의적/반자유주의적 “기본” 시리즈: No Free Lunch
 - 반시장적 정부가격제: 최저임금제, 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의료수가 등
-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규제완화를 넘어선 정책 혁신
 - 공공 중심의 복지에산 절감

II. 복지 New Normal

복지 New Normal: 코로나 현상

- 다양한 양극화
 - 기업
 - 대기업 vs 영세 중소기업/자영업
 - 대면기업 vs 비대면기업
 - ICT기업 vs 전통기업
 - 영업손실 보상해야 하나?
 - 개인
 - 고소득층 vs 저소득층(취약계층)
 - 대기업 정규직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 중고령층 vs 청년층
 - 자산계층 vs 근로계층
 - 자가보유자 vs 무주택자
 - 자산양극화
 - 순자산5분위비율: 166.64배(2020), 125.60배(2019)
 - 부동산/자산 비율: 77.1%(5분위), 29.6%(1분위)
 - 기본소득 필요하나?
- Dual Divides
 - Internal Divide
 - 고용시장 양극화
 - 소득 양극화/ 빈곤 심화
 - 소비 양극화/ 보복소비
 - 교육 양극화: 비대면 교육/ 온라인 기자재 없는 학생들의 피해
 - 주택 양극화
 - 극단적 빈곤(extreme poverty)/ 자살율 증가
 - International Divide
 - 백신국가간 불력화/ 여행 자유화
 - 국가경쟁력 격차 심화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코로나는 국민들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함.**
 - 스스로의 건강 관리 및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
 - 방역과 백신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 수용도가 높아짐.
 - 병의원에 대한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시범적 원격의료 기법들에 대한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 77%”, 2015.5. 21
 -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만족도 87% (2021.2.23~3.8)
 - 일본은 2015년도 도입함.
 - 로봇 등 의료 신기술의 활용이 늘어남.
-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의 활용도가 단순 주거에서 육아 및 업무로 확장됨.**
 -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욕구가 발생함.
 -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거서비스 비용이 급등함.
 - 보유세 인상은 가정의 생활비를 인상시킴으로써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
 -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관련 건강보험료 등 준세금의 증가로 이어짐.
 - 보유세의 인상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전가로 이어지서 전월세가 상승하거나 품귀됨.
 -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공공주택의 공급요구가 복지차원에서 제기됨.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경제사회적 불안이 무상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정부의존도를 높임.**
 - 재난지원금
 - 현금성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
 - 손실보상
 -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제적 lockdown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함.
 - 기본소득
 - 대량실업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 경제활성화 보다는 기본소득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름.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노동시장이 전통/내수산업의 근로자와 ICT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수출중심산업 근로자로 양극화 개편되고 있음.
 - 내수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함.
 - 비대면 및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정규직을 기피하게 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임.
 - 재택근무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work and life balance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음. On-off line 병행
 - 일과 가정의 양립
- 교육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이 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간 학력 저하가 심각함.
 -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
 - On line 수업이 늘고, On-Off line 수업의 병행을 선호함.
 -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학, 코딩 등 교육 내용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
- 정부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 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정치권의 늦장 대응은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를 낮춤.
 - 방역 중심의 코로나사태는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보임.
 - 복지부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공공 중심의 복지를 강화함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노동시장이 전통/내수산업의 근로자와 ICT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수출중심산업 근로자로 양극화 개편되고 있음.
 - 내수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함.
 - 비대면 및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정규직을 기피하게 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임.
 - 재택근무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work and life balance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음. On-off line 병행
 - 일과 가정의 양립
- 교육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이 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간 학력 저하가 심각함.
 -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
 - On line 수업이 늘고, On-Off line 수업의 병행을 선호함.
 -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학, 코딩 등 교육 내용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
- 정부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 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정치권의 늦장 대응은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를 낮춤.
 - 방역 중심의 코로나사태는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보임.
 - 복지부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공공 중심의 복지를 강화함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II. 문재인 정부의 복지 현실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1

- 정부예산의 48%(2021년도 기준)를 보건 복지 고용 및 교육 부문에 사용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1년도 총지출 555.8조원, 보건·복지·고용 부문 199.9조원, 교육 부문 71조원.
 -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실업으로 양극화 심화가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입법으로 청년, 노인,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업 및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림.
 - 복지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음.
 - 양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가비교에 있어서 '주관적 복지 불만족인구 비율'은 19.2%로 OECD 주요선진국의 2배 수준임: 미국 9.30%, 영국 6.005, 독일 9.3%, 프랑스 8.70% 등(OECD, Better Life Initiative 2020)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2

- 복지비 부담이 재정불안정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전이되고 있음: 2021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9조4천억원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38조2천억원이 적자가 됨. 즉, 복지부문이 재정적자의 51.1%의 기여를 함.
 - 문재인정부(2017~2020) 국가채무 186.7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42.2조원), GDP대비 48.4%(2020)
 - 박근혜정부(2013~16) 국가채무 136.9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06.8조원), GDP대비 38.3%(2016)
- 국민들의 복지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국민부담율은 2020년 27.7%임. 2017년 24.8%이후 7년 연속 상승 중임.
 - 사회보험의 적자 및 기초연금 및 무상복지의 확대는 향후 국민부담율을 더 끌어올릴 것임.
- 복지비의 증가와 함께 확대된 복지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증원이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예산에서 일반행정부의 비중(6.4%, 2021)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공무원은 9만2천명이 증가했고, 이는 IMF~2017년 8만7천명 증가 인원보다 많음.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1

-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함: 사각지대와 중복급여
 - 사각지대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의 이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이 부실함.
 - 사회보험의 가입률에서 비정규근로자들은 국민연금 61.7%,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74.4%에 불과함 (2020년도 기준). 반면 정규근로자들은 95%이상 가입 중임.
 -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보고됨(복지부, '2019년도 성과계획서').
 - 빈곤층 907만명 가운데 복지수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임.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35만명을 발굴하여 13만명만 지원함(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실, 2019.3).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2

-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은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복 현금 지원 대표 사례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개월까지 월 최대 4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고령자 채용 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지원
노인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	각종 노인수당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공로수당' '노인수당' 등 지급
청년 자산 형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에게 2~3년 동안 일정 금액 지원
	전라남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청년과 지자체가 매달 10만원씩 36개월간 공동 적립
	경기 양평군	청년 통장	청년과 지자체가 월 14만원씩 36개월간 공동 적립
청년 구직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목적으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취업 지원 목적으로 청년 1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취업 지원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충청남도	아기사당	12개월 이하 아기에 매달 10만원씩 지급
	강원도	양육기본수당	48개월 이하 아기에 4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

출처: 한국경제신문, “[단독] 내년 현금복지 ‘중복살포’ 만 23조”, 2019.11.14

○ 전체 복지사업 대비 중복사업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기준, '17.8월)

구분	전체 사업			중복 사업		
	계	행복e음	범정부	계	행복e음 (사전차단)	범정부 (사후통보)
사업 수	347개	77개	270개	85개 (중복유형: 163종)	60개 (중복유형: 101종)	25개 (중복유형: 62종)
사업 운영 예산 (추정치)	75.1 조	42.8조	32.2조	36.2조	30.8조(85%)	5.4조(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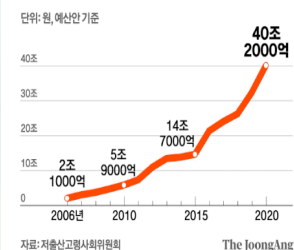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단독] 지난해 복지재정 최대 142억 중복지급...” 부처간 정보 교류 개선해야”, 2017.10.16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3

- 거품/물타기 제도가 많음.
 - 정책목표에 벗어난 제도의 끼워넣기가 성행함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16개 정부부처의 119개가 저출산예산대책
 - 저출산예산에 관공호텔지원 126억원, 만화육성 40억원 등 (2021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황당’ 저출산 예산 사업

※ 2021년 예산

단위: 원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125억8100만
국내 관광 역량 강화	110억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지원	25억6000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5억3800만
게임산업 육성	78억
만화산업 육성	40억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22억5000만
예술 창작 지원	10억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2억8000만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5000만
인공지능 융합형 기술인력 역량 강화	50억

자료: 조명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The JoongAng

저출산 예산 실상은

※ 2021년 예산

단위: 원, ()는 저출산 총예산 대비 %

저출산	13조9614억(32.6)
부동산 임대·용자	24조935억(56.3)
고용, 취업 훈련	3조9202억(9.2)
산업기술 지원	4310억(1.0)
교육	2497억(0.6)
문화·예술·관광	559억(0.1)
보건·복지	530억(0.1)
기타	532억(0.1)

자료: 조명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The JoongAng

출처: 중앙일보, “관공호텔 지원 126억, 만화육성 40억 ... 이게 다 저출산예산?”, 2021.6.22.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4

-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가 심각함.**
 - 국민연금
 - 국민연금 4차재정재계산(2018)에서 2041년 수지균형이되고 기금고갈이 2057년으로 3차재계산보다 3년 단축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재계산위원회가 제출한 4지선다형 대안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
 - 건강보험
 -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0.6%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3.1%임. 2018년 40.8%, 2019년 41.4%였음. 노인인구 비율은 15.7%로 평균보다 약 2.9배 더 사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는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로 0.74%p인상됨. 요율인상율은 매년 2~3% 수준임.
 - 건강보험에서 원격의료, DRG(포괄수가제)의 확대, 진료체계 개혁 등 진료비 절감 노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OECD최고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음.
 - 산재사망율(만명당): 2020년 1.09, 2019년 1.08, 2016년 0.96(최저수준)
 - 고용보험
 - 코로나이전부터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1년 현재 2조7천억원의 적자로 추정됨.**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5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비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 신제도의 도입 및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꾸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코로나의 수혜자인 ICT 및 비대면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와 이에 따른 배분 등의 갈등을 낳고 있는 반면 피해기업들로서 대면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는 습관적 실업과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보편적 복지가 역진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기본소득 논쟁은 기존의 소득재분배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음.
 - 5030의 7번째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은 과거와 달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음에도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낙오층(Left-behind)임.
 - 특히 평준화 공교육은 이들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부모찬스를 키우면서 양극화를 확대함.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 2018년은 163조원의 복지예산으로 3.2%의 빈곤율을 낮춤(0.199에서 0.167로).
1%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50조9천억원의 비용이 듦.
- 2017년 131조원의 복지예산으로 빈곤율 2.4%, GINI계수 0.05 낮춤.

<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빈곤율)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27	0.28	(‘18) 0.25	0.05	0.09	(‘18) 0.09
노르웨이	0.24	0.26	(‘18) 0.26	0.06	0.08	(‘18) 0.08
덴마크	0.23	0.24	(‘16) 0.25	0.05	0.06	(‘16) 0.06
스페인	..	0.35	0.35	..	0.15	0.15
이탈리아	0.28	0.32	0.33	0.12	0.13	0.14
그리스	..	0.32	0.33	..	0.14	0.12
영국	0.31	0.32	(‘18) 0.29	0.11	0.10	(‘18) 0.12
미국	0.26	0.28	0.29	0.17	0.17	0.18
한국	..	0.17	0.20	..	0.15	0.17

출처: OECD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20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재정의 재분배정책 수행 불가능함.
- 복지개혁이 전제된 재정지출이 필요함.

<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GINI계수)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45	0.44	(‘18) 0.43	..	0.34	(‘18) 0.28
노르웨이	0.43	0.42	(‘18) 0.43	..	0.31	(‘18) 0.26
덴마크	0.42	0.43	(‘16) 0.45	0.23	0.25	(‘16) 0.26
스페인	..	0.51	0.51	0.26	0.25	0.33
이탈리아	0.47	0.50	0.52	..	0.34	0.33
그리스	..	0.52	0.53	0.36	0.38	0.32
영국	0.51	0.52	(‘18) 0.51	0.24	0.27	(‘18) 0.37
미국	0.48	0.50	0.51	0.35	0.34	0.39
한국	..	0.34	0.41	0.32	0.32	0.36

출처: OECD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21

III. 복지 Stress Test

복지정책 vs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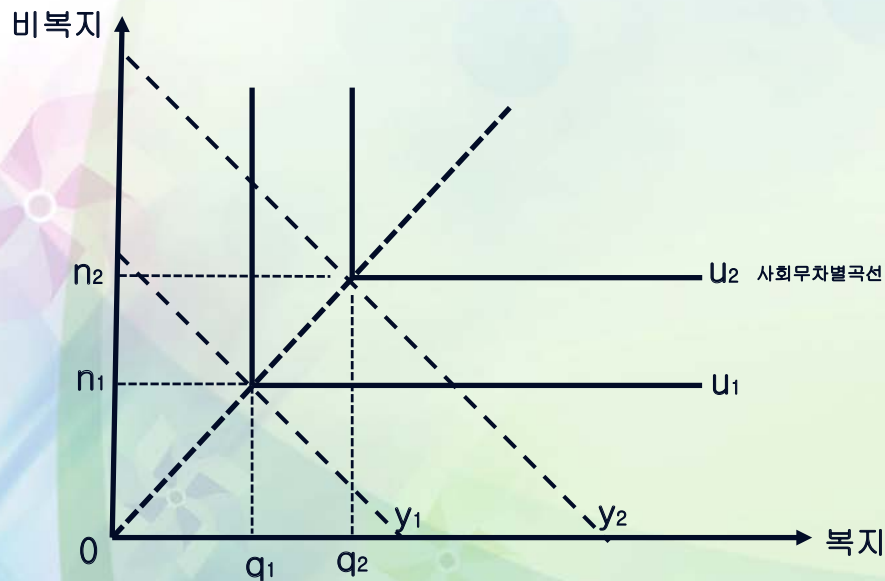
- 왜 복지제도는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의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
 - 복지정책의 이중성
 - 형식적 지원과 비빈곤층에 대한 귀착
 - 취약계층 지원의 유인 억제
- Taxonomy: 복지정책 vs 사회(발전)정책
 - 복지정책(Welfare policy)
 - 빈곤층 대상(소득조사)
 - 소득재분배 개선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전국민대상
 - 사회안정 및 사회발전
 - 사회적 위험관리, 국민의 삶의질 개선, 국민생산성제고(국가경쟁력), 다양한 사회적 요구 충족 등
 - 재원확보 전제

무엇이 '공정복지'인가?

- **Rawls의 Max[min]**
 - 공공과 민간의 조화
 - 의료 뿐 아니라 육아, 교육, 주택 등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적 개념임.
 - 즉, 최고의 복지정책은 '빈곤 박멸(poverty eradication)'
- **문재인정부의 Min[max]**
 - 국가독점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 Equality: '모든(의료) 국민들에게 정부가 똑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하나로 건강보험
 - 무상복지
 - 보편적 복지
 - 교육 평준화
 - 기본소득 등
 - 재정 지출중독/ 국민 복지중독으로 국가파산 가능성
 - 관료적 국영 생산시스템으로 생산성 소멸/복지 부담능력 상실

필수복지(서비스)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그림> 필수복지와 보충복지



- q_1 은 정부가 공급할 필수복지, q_1q_2 는 정부가 예산으로 제공할 수 없는 보충복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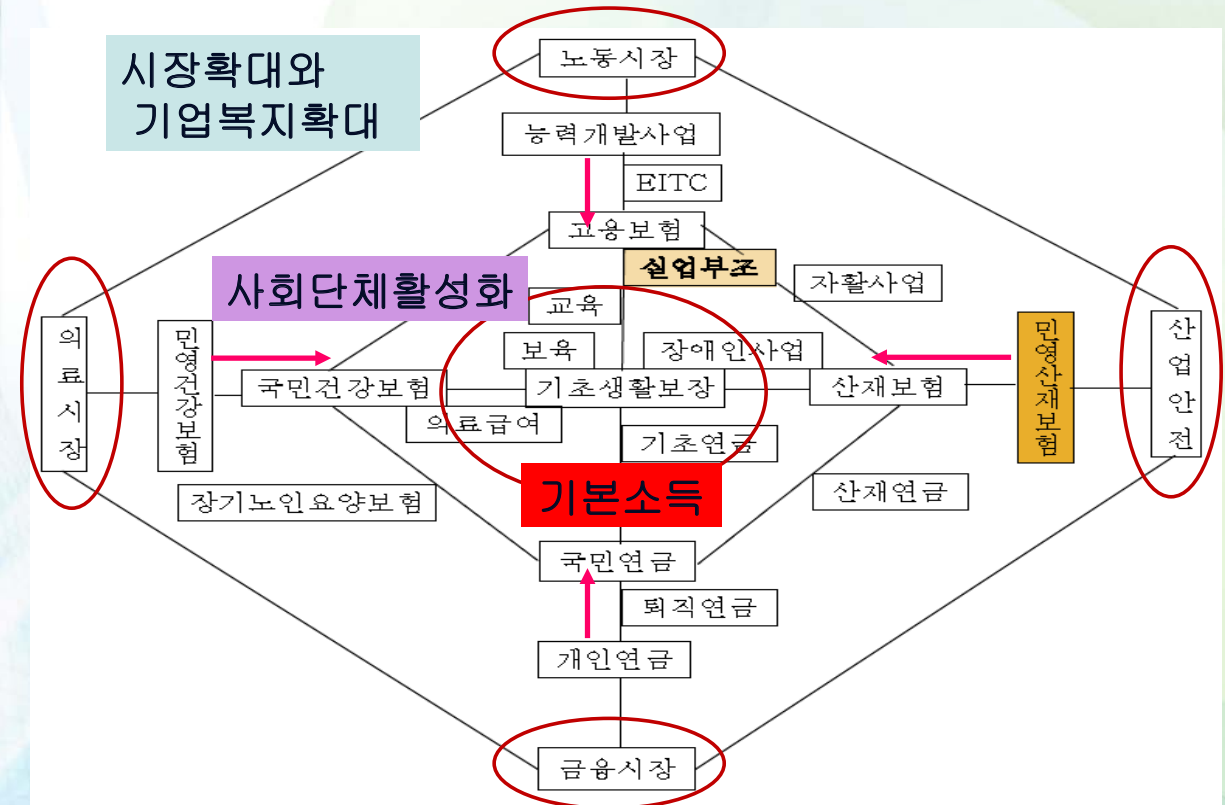
지속가능 복지 Stress Test

- 복지비 지출이 빈곤률을 줄이고 있는가?
-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기본소득제는 기본바우처(voucher)로

- 기본소득의 개념?
 - Type A: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미국 알래스카주
 - Type B: 조건없이 특정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무상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노인수당
 - 청년수당
 - 아동수당
 - 육아수당
 - 실업수당 등
 - ➔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 사회긍정적 효과 없음(청년실업증가, 출산율 저하 등)
 - Type C: 소득조사 후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기초생활에 충분하게 지급되는 수당
 - 기초생활보장급여
 - Type D: 소득조사/소득세신고 후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Negative Income Tax
 - Tax Return
- 기본소득의 방향
 - Type C의 강화
 - Type B + Type D
 - 지급 수단은 Voucher

복지네트워크 모델(2021)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30

복지네트워크 모델: 복지와 경제 (2)

- 소득보장축
 - 안정적 고용
 - 소득의 원천이면서 노후소득의 원천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연금 활성화
- 의료보장축
 -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강관리의 개선
 - 산업안전의 제고
 - 재활 및 장애인 보호

복지네트워크 모델: 복지와 경제 (3)

- 외곽마름모
 - 산업네트웍: 금융, 의료, 노동, 산업안전
- 외곽과 내부의 중간
 - 민간 사회안전망: 민간건강보험, 민간연금, 민간산재보험, 능력개발
- 내부마름모
 - 공공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 내부마름모와 중심
 -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실업부조, 장애인 서비스 등
- 중심
 -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네트워크 모델: 복지와 경제 (4)

- 공공 vs 민간 vs 사회단체
 - 공공
 - 무상 공급자로서 정부의 관료화 및 정부의 실패
 - 복지 부문의 낮은 생산성
 - 민간
 -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기술 개발을 통한 복지 효율화
 - 신복지 기술의 범사회적 확산 및 투자
 - 사회단체
 - 종교 및 NPO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왜 복지지출은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가 대상의 확대에 따라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되고 있음.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를 의미함.
- 보편적 복지의 이중성
 - 보편적 지원은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식적 지원임.
 - 비빈곤층에 대한 혜택에 집중함.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득표 유인 낮음.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복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누수가 심각함.
- 정부부처간 역할 중복
 -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 사회정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 통합 과제
 - 각부처가 노인, 여성, 청년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연금정책의 경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임.
- 국민인식의 부족
 - 중산층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인식함.
 - 복지지출이 후세대의 부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증세의 환상으로 무상, 포퓰리즘에 긍정적임.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질적 서비스중심의 전환
 - 주택급여는 공공주택의 수혜로 전환 등
- 빈곤가구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위치추적, CCTV, 빅데이터, AI 등 ICT기술 적극 도입
- 'Play or Pay' 도입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환수함.
 -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는 주민복지임.
- 자치단체별 상대적 빈곤인구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 자치단체 교부금제도 적용.

중복복지 조정

- 각부처의 복지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야별 콘트
롤 타워를 구축함.
 - 청년, 여성, 노인, 빈곤층 부문 등
- 부처간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유사 업무 분야를 조정하고
집중화함.
 - 유사 복지정책 정리
 - 인적 조정
- 중앙정부의 개인별 투명한 공적이전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 여러제도로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함.

사회보험시스템의 조정

- 사회보험료 징수시스템의 국세청 이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서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함.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진료체계 통합
 -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작업장외에서의 사고 구분이 어려움.
 -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능을 통합한 노인건강보험의 도입
 - 노인장기요양은 진료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사회보험청의 신설
 - 각 사회보험시스템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광역 자치단체별 재정 분리 및 사회보험 차별적 적용
 - 다양한 특성의 5천만 인구를 하나의 제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민영 사회보험 활성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분산관리(Risk Pooling)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일자리 간의 다층 구조화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
 - 민영산재보험 활성화
 -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V. 결론: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 **사회안전망 개혁의 원칙**
 - 개인적 선택의 허용: 공공 vs 민간 vs 사회단체
 -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 “만족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다/ 낭비다.”
 - 제도의 투명성: 4차산업기술의 도입
 - 정치적 역동성 인식: 비정규 포함 모든 근로자 적용
 -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사회안전망의 운영상(경제학적) 원칙**
 - 사회보험급여와 보험료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예측
 - 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경제적 왜곡간의 균형 유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새로운기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행태변화 등에 따라 제고 개선
 -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득재분배 분리
 - **사회단체도 국민생산에 기여**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억제와 근로빈곤층 자립능력
의 제고
 - 중산층 육성: 4차산업기술의 도구화
 - “가족 시스템”의 부활: 생산성 증대의 기본
 - 근로자도 가족: 정부 의존 탈피와 기업 역할 강화
 - 비정규직(On-demand worker)의 보호
- 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양적 질적 공급
 - 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 공공, 민간, 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
 - 금융산업 및 의료산업의 활성화
-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 신뢰제고
 - 민영화/ 영리/ 신기업경영방식 도입
- 안정적 고령사회의 진입
 - 노인노동시장의 활성화: 재교육 강화
 - 4차산업기술은 고령자의 축복: 로봇, 자동번역, AI 등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인생 3모작 사회 시스템 구축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 ICT 복지시스템
 - 정부(사회복지)는 4차산업기술의 최대 수요자: 정보기술, 로봇, 생체공학 등을 성장 뿐 아니라 ‘나눔/sharing’을 위하여 활용
 -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육 훈련 활용
 - 고령자 고용을 위한 로봇시스템 도입 및 도움로봇 활용
 -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과학적 관리
 - 노화 억제를 위한 생체공학기술 보급
 - Big data의 활용을 통한 복지시스템 개혁 등
 - 복지부문에서 정부의 목표지향형 기술개발과 시스템개혁 필요
 - 사회복지의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 통일한국에 대비한 복지제도 및 복지공급 시스템의 구축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북한 복지제도 구축: Jump-up

복지국가, Not-To-do-List for Sustainment

- 복지 이념 OUT
 - 복지의 탈정치화
 - 사회통합 이념의 개발
- 무상복지 OUT
 - Pay-go 적용
 - 선출제입에서 선입제출 복지제도
- 차별(Discrimination) 과 배제(Exclusion) OUT
 - To Inclusion
- Equality OUT
 - To Equity
- 세대간 갈등 OUT
 - 세대간 화합
 - 세대간 융합

복지국가, To-do-List for Upgrade

-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연금과 사회보험 완전 적용으로 대타협
 - 노동시장의 국제기준화
 - 근로자 보호: 산재사망을 억제
- 정부지원에서 민간중심의 다양한 체계적 기부
 - 정부역할의 한계, 나눔기술문화의 확산
- 복지정책에서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
 - 양적 확대에서 사회서비스의 질관리로
- 기회 균등을 위한 육아/교육 형평성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조기 사회진출
- 고령화 투자
 - 정년철폐
 -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복지 3.0(=자본주의 5.0)의 명제

- Exclusion에서 Inclusion으로
- Korean standard에서 (New) international standard로
- Public Service에서 Private service 공급자 모델로
- Innovation from the Public
-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 노후소득보장에서 노후보장으로
- **100세시대 노인복지에서 100세시대 노동개혁으로**
 - **고령사회는 고령자가 주인/ 흑자인생**
- Generation to Generation(G2G) government 에서 Pay-go government로
- **복지정책에서 (질적) 사회발전(번영)정책으로**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현)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분과협의회 위원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4차 산업혁명

- ✓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생명공학, 물리학 등을 **융합하는 기술혁명**
- ✓ O2O(Online to Office), IoT(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등 혁신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초융합(hyper-converged) &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가 도래

■ 디지털 전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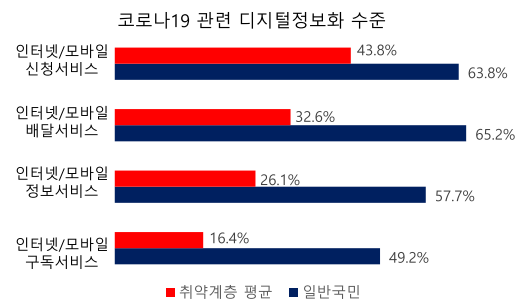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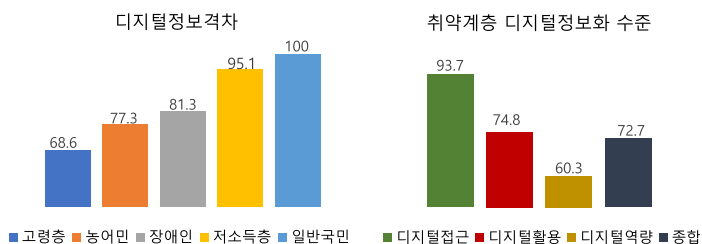


- ✓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진행되지 않는 학문 및 기술 분야는 도태
- ✓ 수많은 "e-things"의 출현 → e-learning, e-commerce, e-business, e-society
- ✓ 디지털화를 통해 원활한 지식 공유와 기술 융합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DIVIDE & SOCIAL DIVIDE

■ 디지털 격차 문제와 정보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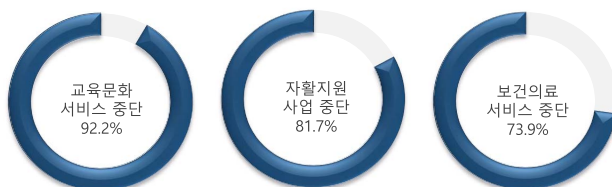
-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인류에 기술의 풍요와 편리한 삶을 제공하였으나 디지털 격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불평등 초래
- ✓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 디지털정보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현저히 부족



3

DIGITAL DIVIDE & SOCIAL DIVIDE

■ 복지서비스 중단과 사회문제 심화



출처: 신재은 외. (2020). 경기복지재단

-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대면 복지서비스 중단
- ✓ 경기침체와 소득분배 악화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증가
- ✓ Digital Divide ⇄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 ⇄ Social Divide



4

POST-COVID19 & e-WELFARE

■ 복지의 디지털 전환 : e-Welfare

- ✓ 복지 정보와 서비스가 ICT를 통해 공유되고 전달되는 상태 → 공간적·물리적 제약 극복 & 복지사각지대 해소
- ✓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되는 환경 → 분야 간·학제 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지 혁신
- ✓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와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복지정책/서비스에 반영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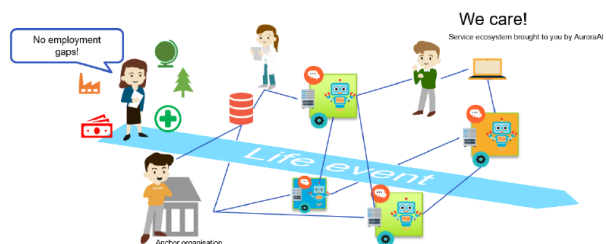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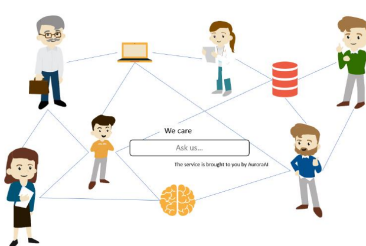


5

EXAMPLE : Finland



- ✓ Kanta Service: Digital-based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2007~)
→ 국민 의료기록을 디지털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의료정보를 열람 & 전자 처방전 발행
- ✓ Apotti System: 사회복지 & 의료복지 통합 시스템 (2012 ~)
→ 개인별 전자건강기록과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기록 등 데이터 공유와 소통·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 Aurora AI Programme: AI 기술을 적용한 공공행정 시스템 (2018 ~)
→ AI가 사회보장데이터를 통해 발생 가능한 생애 이벤트(life-events)와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이용가능 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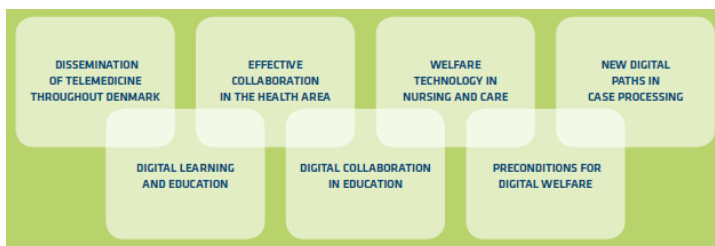


6

EXAMPLE : Denmark



- ✓ e Government Strategy (2011~2015)
 - 디지털화 사무국(Agency for Digitisation)을 설치하는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갖추
- ✓ Digital Strategy (2016~2020)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추진
- ✓ Strategy for Digital Welfare (2013~2020)
 - 원격의료 보급, 보건의료의 협력, 디지털 사례관리 등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복지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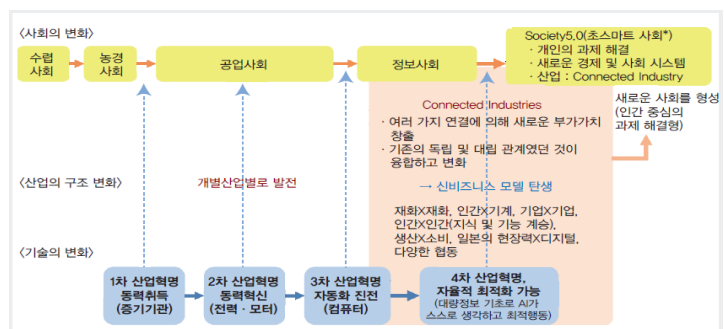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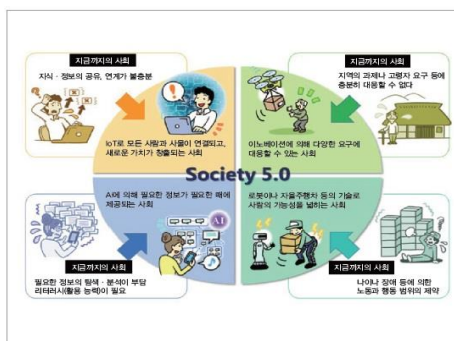
Digital Strategy(위) & Strategy for Digital Welfare(왼쪽)

7

EXAMPLE : Japan



- ✓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 두 가지 목표를 설정
 - 교육 및 고용시장 개혁, 취약계층 지원, 금융기능 강화 등의 사회정책이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병행
 -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전략 분야로 건강·의료·간병 분야를 선정
 - 이동 보조, 배설 지원, 입욕 지원, 커뮤니케이션 등 돌봄영역에서 사물인터넷과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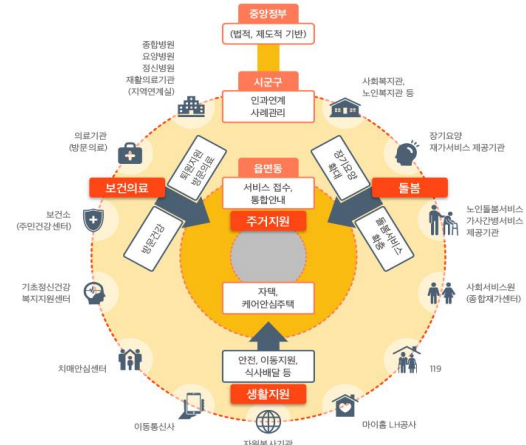


8

EXAMPLE :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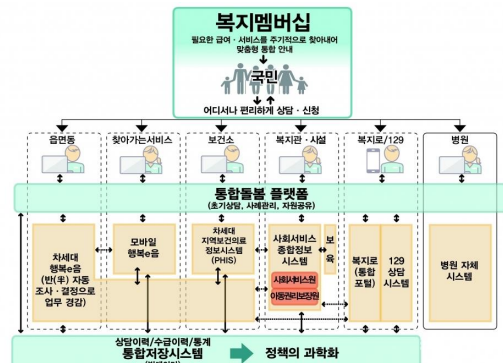


9

EXAMPLE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 AI를 적용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통합 사례관리 기반 구축
- ✓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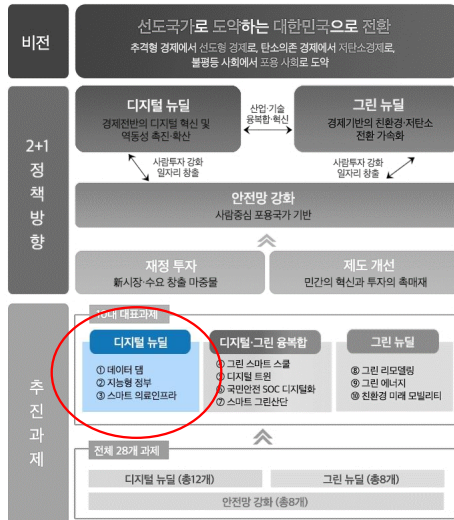


10

EXAMPLE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 한국판 뉴딜 2.0 (2021. 7.)



11

EXAMPLE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 농어촌 마을 574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 공공장소 1.5만여 곳에 공공 WiFi 설치
- ✓ 디지털 배움터 1,000여 개소 설치 및 운영
(전 국민 대상 무료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12

BLIND SPOTS & CHALLENGES

■ 첨단 ICT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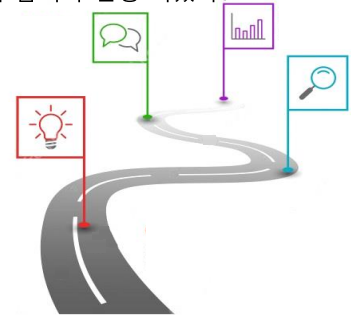
- ✓ 우리의 사회복지현장은 ICT 활용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 디지털 취약계층이 ICT 기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까?
- ✓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 ICT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진행 되었나?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융합', '초연결'의 구현

-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 ✓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 공유와 통합 사례관리 실행
-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중복 방지

■ e-Welfare의 지속가능성 확보

- ✓ 현장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구조 (빅데이터, AI 등 활용)
- ✓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평가 및 연구 (e-welfare think-tank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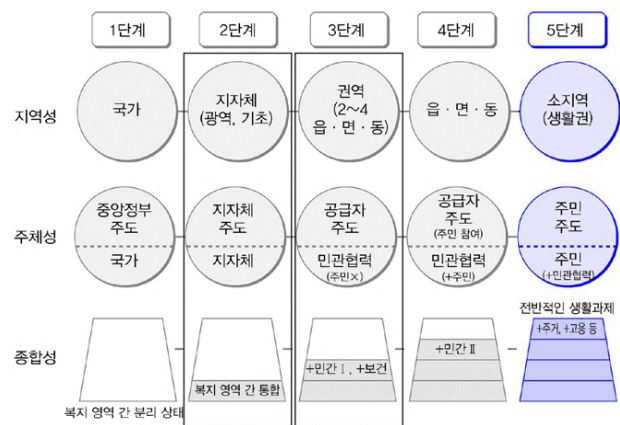
13

BLIND SPOTS & CHALLENGES

■ 복지 거버넌스 발전과정 및 방향

	관료제 패러다임	시장 패러다임	거버넌스 패러다임
핵심 주체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중심 목적	효과적 정책 수행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 삶의 질 변화
다원적 관계	계층제	경쟁	협력
국가의 역할	통제자	규제자	조정자
자원의 활용	공공자원 동원	민간기술 활용	공공과 민간 자원 융합
평가 초점	투입	산출	변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	대상자	소비자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자료: 김보영(2013: 126)



주: 민간 I 은 공식적 민간자원(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민간 II 는 비공식적 민간자원
자료: 박태영, 채현탁(2020)

14

SUGGESTIONS

■ 차세대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

✓ 거점기관의 필요성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e-welfar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
-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결고리



✓ 공공과 민간의 역할

- 공공: 차세대 e-welfare 관련 법률 조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 거점기관의 설치와 운영지원
- 민간: 직접적인 거점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 국책기관과의 연계 (ex.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재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 민간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ex.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양보호시설 등)
 - ICT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ex. 인공지능협회, ICT 기업 등)

15

SUGGESTIONS

■ 차세대 e-welfare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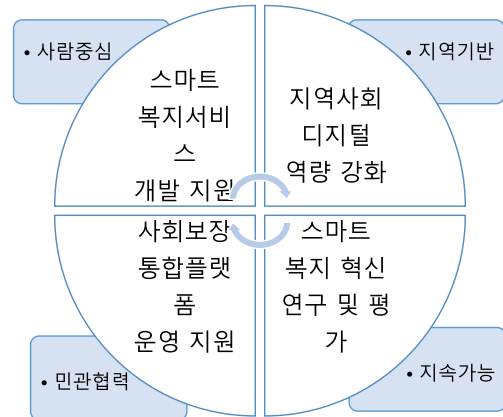
16

SUGGESTIONS

■ 스마트복지센터 (Smart Welfare Center)

✓ 스마트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 수행
- 서비스 현장의 의견과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 지역사회기관 및 보건복지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와 운영 지원
-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협력방안 모색
- Think Tank로서 연구 및 평가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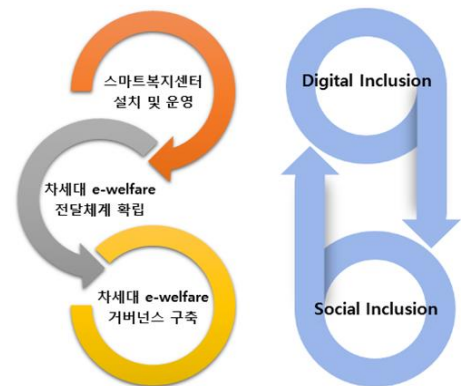


17

EXPECTATION & IMPACT

✓ 기대효과와 전망

- 빅데이터 활용 욕구기반 e-welfare 서비스/정책 개발
-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문제 완화
- 지역사회와 종사자의 ICT 활용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
- 통합플랫폼의 구축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와 협력 증대
- ICT 전문 보건·복지 인력의 필요성 증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민간의 다양한 구성원이 정보공유·의사소통·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Digital Divide ⇄ Social Divide” 악순환에서 “Digital Inclusion ⇄ Social Inclusion” 선순환 구조로 도약



18



THANK YOU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토 론 문

박 영 용 회 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부회장

여는말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에 대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리며 차기 정부를 넘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에 대한 제언에 고민의 기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발제문 형식이 아닌 발표자료(ppt)의 형식의 발제의 한계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자 하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발제와 제언 중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정책(사회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에 양적 확대와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을 더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확대

교수님의 지적처럼 복지비의 증가, 복지정책의 양적화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알지 못해서, 알아도 신청절차 등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올해 4월 28일 개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

1단계 (2020년)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처럼 중앙부처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단계 (2021년)



광역/기초 자치단체

지방보조금사업처럼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17개 광역자치단체 **578개** 서비스
- 226개 기초자치단체 **5,524개** 서비스
- ※ '20년 8월 지자체 서비스 목록조사 기준
(서울) 출생축하용품 지원
(강원)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 등

3단계 (2022년)



공공기관·민간단체

기관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서비스
- ※ '21년 조사 예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청년 캠퍼스
(한국가스공사) KOGAS 온라인 장학금
(KT&G 복지재단) 수리소리마소리 -청각장애인
후원사업 등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오는 9월13일부터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여 2022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 중앙부처는 34개 부처 305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578개,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5,524개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이라는 보도자료(2021.09.06.)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2021년 5월 기준 356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복지, 저런 복지 다 알려드려요!



2. 사회보장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

행정안전부의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의 발표한 복지사업으로 그 종류가 356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서비스)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적절히 제공되는지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일하며 전국 3만여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인 저로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전문연구부서(기관) 신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관계부처와 신설,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간담회(2021.3.17.)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2018년 1,028건 요청/ 979건 협의, 2019년 1,124건 요청/ 1,117건 협의, 2020년 974건 신청, 656건 협의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 시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입니다.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요청건수는 물론 협의된 건수도 매우 많은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검토하는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담보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교수님의 지적과 같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중복성의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신설, 변경 등의 검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업무에서 분리, 전문연구부서를 신설, 전문화하여 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수행을 위한 체계인 시스템과 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 제도의 실천적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나. (가칭)국민복지증진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감염병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선은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주력할 것이며 코로나19 유행상황 이후에도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만성

질환, 기후변화와 3같은 예견된 위협, 그리고 희귀질환과 같은 사각지대의 질병도 꼼꼼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과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되며 국민의 욕구나 요구도 전문화되고 있기에 이를 분리하여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적인 내용이지만 건강과 복지관련 업무를 분리하고 생애주기별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 보건복지부를 분리, 개편하여 가칭 국민건강안전부와 국민복지증진부를 신설하고 국민복지증진부를 모든 국민의 행복시대에 맞도록 부총리로 승격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부총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추진은 물론 그 효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정 인력 배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은 거의 없고, 지방직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파견 또는 전입 받아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8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로 ①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②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③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의구심을 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가 매우 많고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업무깎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한 업무만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위의 사회복지제도의 양적확대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수히 많은 복지제도가 여러 중앙부처에서 신설되어 결국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팀으로 분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부처의 모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수행체계 즉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의 분장을 소관 중앙부처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고 제도 신설시 사업을 집행(시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증원, 재배치 등)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현장에서는 복지제도와 관련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재난지원금이 신설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적·사회적 재난임과 대상자의 범위(전국민, 소득하위 88%) 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업무의 실체적 분석을 통한 업무분장과 추진이 아니라 누군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서에 떠넘기듯 분장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제도의 신설시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차기정부의 복지 :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정 인력배치는 웬말인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 즉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 국민복지증진대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개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한공개경쟁시험을 거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49명이 최초로 배치된 것이 시작입니다.

최초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치되었으나 현재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중앙부처의 356개 복지사업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수많은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제도 또한 전문적이기 보다 단순 집행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지사업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등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채용 확대에 따라 일반 행정공무원 준비생 또는 대학졸업자 등이 다소 합격선이 낮은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교 및 평생교육원 등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를 취득 후 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사명)보다는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우선시 되었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민과의 갈등, 사회복지직공무원 내부 간의 갈등, 기타 직렬과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회복지의 직무가치, 기본가치(철학)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시도복지국-시군구복지국-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인력 기준(팀 구성 및 인력배치안 포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특히 읍면동, 시군구의 통합조사 및 관리팀 등) 대상자 수를 법제화하고 복지부서(시도 및 시군구 복지국, 예하 부서) 및 복지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서장(국장, 과장) 및 복지팀장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맺는말

공정한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천명하며 촛불혁명으로 등단한 문재인 정부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코로19로 인한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차기 정부 및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사회복지 플랫폼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며 특히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이정숙회장님과 법인 관계자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삶의 절망에서 삶의 희망을 갖도록 헌신하는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직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김 광 병 교 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

현) 사회복지법제학회 총무이사

우선 저의 토론이 완성된 발제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보고 한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고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문을 보면서 경제학자이신 교수님의 발표에 사회복지학자인 제가 토론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었기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교수님께 실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만 교수님의 발표에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첫째, 중복급여 문제입니다.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포플리즘 복지 경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보장의 중복금지의 정당성도 부여해주셨습니다. 중복급여가 언뜻 보기에 국가가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은 대상자들에게 급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추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급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하지 않는 사회보장사업을 지역적 차원에서 발굴하거나, 시행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차원에서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태로 사회보장사업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복지’ 또는 ‘지역형 복지’라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에 적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인 조례로 제정해야 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자치복지는 학문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판 96추244)에서도 생계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치복지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포퓰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포퓰리즘이라 할 때는 그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복지와 국가가 행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의 자치복지는 더욱 강화되고 권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수님께서서는 반자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정부 가격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무상 관련 기본 시리즈, 최저임금제, 이자율 상한제, 의료수가 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들이 자본주의나 시장질서에 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자본주의나 시장질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자본주의를 더욱 자본주의답게 자유주의를 더욱 자유주의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복지의 양적 확대가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주요국과 비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된 복지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것)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통계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2017년 OECD 평균이 34.2%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부담률 27.7%를 적용하더라도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에서도 빈곤율을 볼 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빈곤율이 낮다는 것은 이들 국가는 소위 복지국가로 불리는 국가들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민부담률과 그에 따른 복지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더 낮추려면 더 많은 복지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적립방식의 문제, 연금수령 나이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저는 현행 연금 보험료 9%를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비율처럼 18%까지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봅니다. 연금액 수준을 낮추는 방향은 국민연금의 취지상 바람직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서 8%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안 내드립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국가독점사회주의라 하시면서 평등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건강보험,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교육 평준화, 기본소득 등을 들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그 중요성을 국민이 더욱 체감하고 있다고 보며,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등은 최소한의 종류(복지 영역이 매우 다양함) 즉 기본적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독점사회주의는 아니고 헌법상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 명시한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교수님께서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부의 소득세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향으로 설정하시어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면 보편적 방식, 다른 하나는 동일인구집단에 지급하는 사회수당 방식, 마지막으로 선별적으로 Negative Income Tax 같은 방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Negative Income Tax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로 또는 소득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무조건성 수준에서 진일보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현존의 사회적·경제적 제도에 의해서 충족될 수 없는 공동의 욕구를 가진 집단에 지급하는 소득지원정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논의는 선별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방식이거나 동일인구집단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이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재정상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인구집단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교수님께서서는 복지정책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정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에는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과 자립을 지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제도의 성격에 따라 보편적인 제도와 선별적인 제도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여덟째, 교수님께서서는 민영 사회보험 활성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분산 관리하자고 주장하십니다.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큼니다. 집단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제가입을 도입해야 하므로 민영 사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통한 견고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에서 사회보험을 추진한다면 자율성에 따른 선택에 따라 규모가 나뉘어 크기가 작아질 것이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줄어들 것이고, 운영 주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될 것입니다.

아홉째, 교수님께서서는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복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를 마치 경제적 생산관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이상은 개별성에 따른 욕구 충족도 필요한 것입니다.

토 론 문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과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의 상당한 비중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생활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복수급 현상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목도하고 있는 한편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의 가치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복지 체감도 제고는 국가 복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이러한 지향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대안과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문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 3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전달체계는 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잡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단시간에 처리하고,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복지급여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DB를 통합·관리하여 수급자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별로 상이한 소득이나 재산 조사 방법을 통일하거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사업마다 다르게 제시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효율화 방식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자료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제고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도록 하여 업무 담당자의 정보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연계나 조정을 통해 급여의 불합리한 편중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복지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복지환경에서는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미달로 공공영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자원의 중복을 예방하며, 기관 간 정보 협업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은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민관 간에 서비스를 상호의뢰하고 연계·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해 나가는 단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통합·구축입니다.

행정데이터는 행정기관이 행정 처리나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개별 행정기관은 각기 다른 목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및 가구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행정데이터는 대부분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업무 효율화에 활용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며 향후에도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합리적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수집 및 관리하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국가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로 활용한다면 정책기획과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 별로 흩어져있는 자료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국민 행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활용 목적으로 구축된 행정데이터는 사회현상의 진단과 동향의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미래 사회문제 예측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의 소모적 논쟁은 경험적 증거와 객관화된 검증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책개발 과정에 행정데이터 활용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에 비해 증거기반 정책을 강조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이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활용을 위한 행정데이터 구축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적 규제나 사회적 인식 문제와 맞물려있습니다. 자료의 오남용이나 보안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도 중요한 준비사항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복지와 ICT 융합 기반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왔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수당과 같은 제도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상실 위험 이외의 다양한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고용불안정이나 인구고령화, 돌봄, 저출산 등의 위기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러한 새로운 위기는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복지재정의 건전성 이슈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활용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ICT 기술을 결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사회문제는 전통적인 소득보장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시각, 사회문제 해결에는 단일한 측면의 개입이 아닌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는 복합적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해결을 동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는 개입의 직접적인 효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ICT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IC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서도 비대면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지자체 수준이나 민간기관 차원에서 IC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거나 IC 기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IC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와 IC 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IC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 사회적 욕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회문제에 따라서 관련 영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사자나 이용자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과 IC 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체계가 도입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가 발굴되고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토 론 문

이 상 철 실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 사회안전망 전환 필요 -

①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설계 방향

□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금과 같은 양적 복지 확대는 지속 불가능

-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372.6조원, 최근 5년간 29.1% 증가하였으며, 지자체 단위 복지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감사원)
-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기준 129조 895억원으로, 2009년 59조 6,547억원의 2.16배 증가
 - 동 기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연 1.7%인 물가상승률의 4.7배에 달하고, 명목 GDP 성장률 연 4.8%를 크게 상회
 - 특히 매년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기업 지불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 기업부담 및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보험 기업부담 증가율	5.7	13.2	12.8	6.7	8.5	6.9	6.8	5.6	8.6	7.9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15.3	12.2	5.1	2.1	1.3	0.3	2.6	9.2	4.0	0.4

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결산서 및 통계연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안전망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바, 차기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 없는 무분별한 양적 복지 확대보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 제시 필요

-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국민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사회보장목표를 설정해야 함.
-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된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재정누수 등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증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 ‘질적 보장 강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율이 너무나 안이하게 결정되는 구조

- 그간 국민건강보험은 ‘합리적 비용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할 정도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우려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보험료를 매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쓰는’ 정책을 추진
 -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양적 보장성 확대는 더 비싼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옴.
 -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 명분의 양적 보장성 확대는 국고지원의 과다 투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증가 추이 >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요양급여비	414,914	442,654	493,987	531,967	614,234	671,304
증감율	7.9	6.7	11.6	7.7	15.5	9.3

자료 : 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 특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보장률’ 개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은 지표는 개

선되지 못하면서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율만 너무 안이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

- 2020년 한해 건강보험료는 63.1조원으로, 동 기간 근로소득세 40.9조원보다 54.3%, 법인세 55.5조원보다 13.7% 높은 수준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보장률 목표 제시를 지양함으로써 양적인 보장성 확대보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을 두텁게 해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계가 없도록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짜’가 아닌 본인의 ‘비용’으로, 전면적인 ‘양적 급여 확대’보다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 강화’로 장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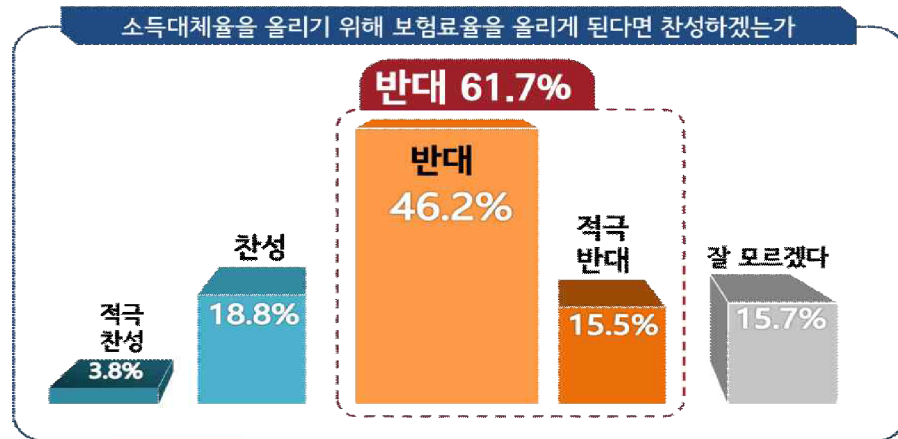
③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확보가 우선

□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은 진정한 연금개혁 방향이 아님.

-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하는 참여주체의 편중성으로 인해 보험료율은 9%에서 12%,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늘리는 안이 다수안으로 제시
- 연금특위 논의 당시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주 52시간제 추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유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
-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는 것은 현재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에 더 큰 고통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
-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은 본질적인 연금개혁 방향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안도 아님.
- 경총이 실시한 「2020년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반대 61.7%, 찬성 22.6%로 조사됨.

<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자료 : 경총('20.5월), 2020년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미발표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없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의 독립성 제고, 방만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다양한 옵션을 활용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 환경을 사전 조성한 후 충분하고 균형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

④ 산재보험과 예방 기능 연계 필요

□ 산재 보상과 예방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산재보험은 적극적인 적용대상 확대와 산재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 보호'를 강화한 결과, 산재보험 급여수급자 수와 급여지급액 모두 상당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장해연금 등 연금급여 비중도 상당해 수급자 수가 현행과 같이 계속 증가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재보험 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급여 수급자 수(명)	269,893	269,510	283,514	297,239	320,184	350,363
급여지급액(억원) (증가율)	40,791 (3.8%)	42,801 (4.9%)	44,360 (3.6%)	50,340 (13.5%)	55,293 (9.8%)	59,968 (8.5%)
연금급여 비중	44.1%	43.9%	44.4%	42.2%	40.8%	39.6%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 보호 확대·강화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실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산재보험 수급대상인 산재환자를 줄이는 것임.
- 산재환자가 줄어들면,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차기 정부는 산재보상 확대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 유인이 감소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 필요
- 특히 우수한 산재예방 활동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킨 사업장에 적극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산재보험과 예방제도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선진 외국은 산재예방요율제 및 개별실적요율제 등을 통해 예방활동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율은 과거 $\pm 50\%$ 에서 $\pm 20\%$ 로 축소되어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

⑤ 기본소득보다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재정지원 필요

□ 기본소득은 결국 대규모 증세를 유발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현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현재의 기본소득 논란은 중산층 이상에 이르기까지 소득수준에 제한받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담론으로 함.
- 기본소득은 그 자체가 전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큰 고비용 복지제도임.
 -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도 조세부담률은 18.8%(2017년 기준)에서 28.8%까지 높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월 30만원 혜택을 보는 대신 지금보다 세금을 50% 이상 더 납부해야 함을 의미
- 반면, 현 시점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익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규모 증세는 고용, 투자, 소비 등 우리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기본소득 지급액과 조세부담률 (2017년 기준) >

기본소득 지급액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미지급 (현재 수준)	18.8%	25.0%
월 30만원 지급시	28.8%	36.0%
월 50만원 지급시	37.1%	43.3%

주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GDP
 자료 : 최한수,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2020

□ 기본소득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대체 불가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국민이 부담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준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계층을 필요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즉, 실직자(실업급여), 환자(건강보험)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집중 지원하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의 조기 복귀를 지원
-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급여(2015년 14.5조원)를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1인당 월 23,000원(연 282,000원) 지급 가능

-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까지 폐지하면, 지급 가능한 기본소득은 월 116,000원에 불과한 바,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른 지원 없이 월 2~11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더더욱 어려움.

< 기본소득 재원조달방법과 문제점 >

재원조달방안	증세여부	월급여액	문제점
기존 현금급여의 기본소득화	없음	2.3만원	▪ 저소득층 지원 감소
모든 공제제도 폐지	실질세율 인상	11.6만원	▪ 저소득층 지원 감소 ▪ 이익집단 저항 ▪ 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료 : 최한수,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연령대를 중심으로, 2019, 한국 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2020 재구성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경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마치 소득불평등과 빈곤 해결의 획기적 대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됨.
- 여러 한계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
 -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를 통합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액만 지급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급격히 감소함.
 - 반대로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려면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7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본 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ll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속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속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1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케이터 전문위원회 위원장)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플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 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 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 데일리안
http://www.snailbo.co.kr/sub_read.html?uid=425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 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 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 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 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 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ai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헌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중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옥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일시: 2021년 10월 22일(금) ~ 24일(일)

-장소: 전남 신안

2. 토 론 회

-일시: 2021년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포스터 첨부

3. 힐링등산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장소: 양평용문산 야외공연장

4. 토 론 회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복지포폴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재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5. 토 론 회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1700조원 돌파한 국가부채

(단위:조원,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래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